‘원형복원은 무엇인가’ 화두 던지다

미륵사지 석탑 복원 논란이 남긴 것들

감사원 “원형과 달라” 지적에
“역사성 보존 조치였다” 반박
전문가도 복원 과정 이견 無

근대 이후 도입된 ‘원형’개념
지금까지도 논의 중인 상황
원형 개념 정립 · 원칙 세워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월 23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부실복원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3월 21일 공개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정비를 진행하면서 일관성 없이 축석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석탑 상 · 하부 내부 형태가 원형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의 요지는 △해체 당시 확인된 축석 방식의 기술적 재현 가능성 등 원형 복원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설계도서를 마련하지 않고 시공 △적심부 충전재 자문 없이 변경 등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구조안정성 검증과 조치 방안 검토를 통보했으며, 일관성 있게 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석탑 내부 적심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가치 보존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20년에 걸쳐 해체 보수를 완료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 공개 선언 하루 만에 부실 복원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이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지적하는 주된 요지는 현 복원이 ‘원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원형’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도 문화재 원형 개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발간하는 문화재 보존 학술지인 〈문화재〉는 지난 2016년 문화재 원형 개념에 대한 기획특집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특집에서 이수정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학예연구사는 한국 문화재 보존 · 관리에 있어서 원형 유지 원칙이 어떻게 유입 · 안착됐는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원형’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1921년으로 권덕규가 석굴암 보수방식을 개탄하면서 사용한다. 이후 원형 개념의 역사성은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쪽으로 안착됐다.

이수정 학예연구사는 “국제적 보존원칙서 역사성은 모든 시대적 층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다양한 시대적 층위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그 결과 원형은 문화재가 탄생한 특정 시기의 모습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 관계에 대해서 살핀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건축문화재에서 ‘원형’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보존의 출발점”이라면서 “건축문화재 원형 논쟁은 예술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의 원형 가치 경중에 따른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185t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해체된 미륵사지 석탑 복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해체 전 형태 유지부터 부분 · 완전 · 라임스톤 활용 · 두랄미늄 활용 등 다양한 복원 방안이 제기됐다. 결국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해 6층까지 되살리는 ‘부분복원’을 선택했다.

마지막 기록 사진도 6층까지 확인되고 현재 남아 있는 부재도 7층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수정비 주된 방향 중 하나가 ‘추정 복원 지양’이었다. “남아있는 상태로 수리함으로써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는 게 지난해 석탑 언론 공개 당시 실무진의 설명이기도 하다.

일선 문화재 전문가들도 복원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밝히기 않았다. 한 문화재 전문가는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할 수 있는 석탑 복원 중 최선의 복원”이라며 “20년 간 석탑을 복원하며 한국 문화재 보존기술도 함께 발전했다”고 밝혔다.

학계 원로학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다. 추정 복원 지양이라는 기관의 기본자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복원된 석탑의 서측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조금은 더 원형적인에 접근했으면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다. 행정적 영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시 돌려줄 위기 놓인 ‘은닉 성보’

‘몰수’ 선고 없는 점 이용해
사립박물관 A씨 반환 소송
현 형사심도 ‘몰수’선고 없어
검찰 · A씨 항소… 2심 진행
피해 사찰 “부모 잃은 죄인”

3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장. 방청석에 스님들이 대거 자리했다. 사립박물관장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심리 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상기된 얼굴의 스님들은 판사와 검사, 상대측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왜 스님들은 법정 방청객에 자리한 것일까.

이야기는 지난 2016년 B씨가 은닉해 오던 불교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 부터 시작된다. 당시 그들의 범행은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은 압류됐다.

이후 B씨의 문화재 알선 혐의는 A씨의 은닉 혐의와 함께 병합돼 형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몰수 여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닉 행위 이전에 도난 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A · B씨 역시 양향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뤄진 문제는 또 있다. A씨는 2017년 3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건 인도 등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그는 2014년 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돼 2016년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법원은 몰수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A씨가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관련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인은 “A씨의 은닉문화재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설사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어도 추후 자의가 아닌 결정이었음을 내세워 민사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도 반환된 판례가 있다. 몰수 선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조계종 역시 현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도난 성보가 원래 봉안처로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압수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차례 보냈다.

지난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가장 애가 타는 것은 피해 사찰들이다. 주불 아미타불을 도난당한 전북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은 “1993년 8월 27일 새벽 1시 절에 몰래 들어와서 부처님을 훔쳤다. 25년동안 안 다닌 곳이 없이 다니며 부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부모님이다. 부모를 잃어버린,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왔다. 다시 우리 부처님이 사찰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여전히 오류 있는 도덕교과서 불교서술

불교사회硏 · 강창일 의원, 3월 27일 세미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 · 중 · 고교 도덕 · 윤리 교과서의 불교 서술이 단편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초 · 중 · 고 고등학교 도덕 · 윤리 교과서 불교관련 서술내용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초 · 중 · 고교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를 연구 · 분석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 서술 내용을 살핀 김완수 전북 이리 부송초 교사는 “영역명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불교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면서 “간혹 명상의 과정이 언급되고 법정 · 틱낫한 등 유명 스님들이 해당 주제에 맞게 소개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 속 불교관련 내용’을 분석한 김은미 전주교대 강사는 “삶의 소중함, 마음의 평화 등 자연과 초월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현행 9종 교과서가 모두 불교 윤리학적 논의를 다루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일부 교과서에서 종교들 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 설명할 때 불교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반복하고,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선 해탈해야 한다’는 단선적 논지로 설명한다. 충분한 설명이 없어 학생들이 자칫 불교를 허무주의 · 비관주의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신희정 창원 중앙고등학교 교사 역시 불교 핵심 용어이 단순 나열, 압축 요약 등의 방식으로 설명돼 학생들이 올바른 불교 이해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는 박영주 울산 무거초교 교사, 허남결 동국대 교수, 김호귀 동국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신성민 기자

도심 속 ‘참선지도사’ 거듭나보자

참선지도자협회, 제2기 참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지난해 도심 속 참선 열풍을 불러일으킨 참선아카데미가 올해에도 마련된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는 4월 12~13일부터 7월 19~20일까지 각각 일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기 참선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일반인반 12일 오후 2시 개강해 7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120분간 진행된다. 직장인반은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참선아카데미는 260명이 수강해 주목받았다. 올해에는 한국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 명상 고수들이 강의에 나선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를 통한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대종사 혜국 스님의 특별법문, 세계명상 수행승 각산 스님의 ‘참선 이론과 실제’, 내소사 고승 일오 스님의 ‘한국의 대선사 도를 말하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의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의 ‘너의 마지막 숨까지 수행하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참사람 수행법’,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은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전현수 정신의학전문의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 수행’,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문화기자는 ‘일상에서 깨달음 실천하기’를 각각 강의한다.

참선지도자협회 측은 “이번 강좌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참선지도사와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문 명상지도사를 길러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강생 모집인원은 각 반별로 150명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28만원이며, 전체 수업일수 70%이상 출석과 봉사활동 20시간 이수가 졸업요건이다. 강의 장소는 서울 참불선원이다. (1577-3696)

윤호섭 기자

